인터넷신문 www.경영저널.com

경영저널

신년특집 165조원 들여 일자리 22만개 창출한다
COVER STORY 이재훈 제6대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테크노파크 특집 '경북TP, 올해 중점 추진 전략 발표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영길 제10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포커스 리딩 농작물재해보험 내실화 통해 농가경영 안정 도모해야
지자체는 지금 경북도, 국비예산 11조 시대 닻 올렸다
Hot Issue 쌀값 하락세 지속... 변동직불금 예산 대폭 증액
사회 취수원 구미이전 두고 대구·구미시 간 갈등
Special Section 마을기업, 주민 소득 향상 첨병 '눈길'
메디컬 증상은 같아도 원인은 다양한 소화기 질환

50th
2015 1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정책가치 실현을 위해
맞춤형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입니다.

www.kpar.kr

주요사업

- 사회여론조사
- 고객만족도조사
- 기업이미지조사
- 광고효과조사
- 행정만족도조사
- 선거 및 공론조사
- 마케팅조사
- 기타여론조사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래
100여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책결정을 위한
최고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재단법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

본　　원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0길(옥산동)
Tel) 053-811-2820
대구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
Tel) 053-766-0038　Fax) 053-766-0379

Contents

www.경영저널.com
January 2015

07 **정책**
대구시, 2015년 신성장 동력 육성 총력

08 **신년특집**
165조원 들여 일자리 22만개 창출한다

10 **신년특집**
대구 도시계획용도지역 전면 재검토 필요성 공감대 확산

12 **웅도(雄道)경북**
경북도,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농촌경제 살린다

14 **Cover Story**
이재훈 제6대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컨트롤타워 역할 차질없이 수행할 터"

18 **경북테크노파크 특집**
TP거점 기능 강화 · 창조적 혁신기술 지원 주력
경북TP, 올해 중점 추진 전략 발표

20 **경북테크노파크 특집**
경북TP, 명실상부한 경북지역 대표기업 지원
허브기관 자리매김

22 **경북테크노파크 특집**
이재훈 원장은 누구인가?

24 **Industry**
자동차튜닝산업, 대구 · 경북 창조경제 견인 핵심
사업군으로 급부상

26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영길 제10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경상북도 세계 물 산업의 메카! 경상북도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7th World Water Forum
Daegu & Gyeongbuk, Korea

기간_ 2015. 4. 12 ~ 17 (6일간)

장소_ 대구 EXCO,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Water for Our Future"

규 모 국가정상급 포함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연인원 4만여 명

내 용 포럼 – 4개 주요과정별(주제별 · 정치적 · 지역별 · 과학기술) 논의 및 시민포럼
EXPO & Fair – 물 관련 우수 정책, 제품, 기술 등 전시

세계물위원회(WWC)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매 3년마다 개최하는 물 분야 최대 국제행사

The World Water Forum is the world's largest meeting on water and is organized every three years by the World Council. The 7th World Water Forum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secure and implement concrete actions to build a water-secure future.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7th World Water Forum 2015 · WORLD WATER COUNCIL · 국토교통부 · eride GyeongBuk · Colorful DAEGU

Contents

28 **포커스 리딩**
농작물재해보험 내실화 통해 농가경영 안정 도모해야

30 **Economy**
국내 600대 기업 설문
"우리 경제 올해 부진 지속 전망 우세"

32 **초대석**
김채환 안심창조밸리추진협의회 위원장

34 **지자체는 지금**
경북도, 국비예산 11조 시대 닻 올렸다

36 **이슈 앤 이슈**
대(對)중 수출 빨간불…한국경제 경고등

38 **핫이슈**
쌀값 하락세 지속…변동직불금 예산 대폭 증액

40 **진단 지역경제**
올해 지역경기 전망 '흐림'

42 **사회**
취수원 구미이전 두고 대구 · 구미시 간 갈등

44 **통계로 보는 대구 · 경북**
대구 · 경북 재정자주도 곤두박질

46 **청호(靑湖)칼럼**
修己와 공자의 4敎

48 **Special Section**
마을기업, 주민 소득향상 첨병 '눈길'

50 **출동 현장속으로**
남부권 신공항조성사업 백지화 우려감 확산

52 **메디컬**
증상은 같아도 원인은 다양한 소화기 질환

54 **지역소식**

경영저널 통권 제50호

발행인·인쇄인	이진구
편집장	서기대
취 재	배은정
사 진	김원현
편집디자인	류영철
편집위원	민경량, 서용준, 윤정현, 홍순대
광 고	한혁동
인쇄처	신흥인쇄(주)
발행처	www.경영저널.com
본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46-8
대표전화	대구 053) 766-1368 FAX 053) 766-1356 경산 053) 811-2820
등록번호	대구라07691
창 간	2007년 11월 5일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구독 및 광고 문의	053)766-1368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90,000원
정 가 : 8,000원
예 금 주 : (주)경영저널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제 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 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대구 · 경북 시 · 도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706-8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k_journal@daum.net
전화 053) 766-1368 FAX 053) 766-1356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나눔캠페인
나눔! 행복으로
되돌아 옵니다
ARS기부 060-700-1212
기부상담 080-890-1212
www.chest.or.kr

대구시, 2015년 신성장 동력 육성 총력

대구시가 올 한해 미래 먹거리 유망산업 육성에 총력을 펼친다. 당초 정부안보다 1천억원 이상 증액된 3조원 대의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해서다. 미래 성장 동력산업 및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할 수 있는 호기(好機)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는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2015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의결에서 국비예산 3조2천247억원(경상적 복지비·교부세 제외)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천449억원 증액된 것으로, 6년 연속 국비예산 3조 원 이상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대형 SOC사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권영진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수시로 찾는 등 밤낮 없이 발품을 판 결과물이란 평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중점 추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국비 확보 TF팀'을 구성하고 국비예산 확보에 전력을 쏟아왔다.

대구시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예산에 대해선 대구의 장기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미래 먹거리사업과 창조경제 및 R&D 관련사업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SW융합기술 고도화 △창의·감성 디바이스 제품화기반 구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 창조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감성터치 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를 비롯해 대구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사업,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및 U-헬스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대구의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첨단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근들어 국방뿐만 아니라 산업, 문화, 과학분야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기술을 활용한 안전·편의 서비스용 스마트 드론 관련 기술 구축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한 탓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레이저 핵심부품의 국제공동개발사업에 뛰어들기로 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대구시는 아울러 세계적인 의료 R&D 허브로 주목받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에 예산 473억원을 반영하는데 이어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설립 및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복안이다.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물산업 육성에도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올해 4월 대구와 경북에서 열리는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관련 기술을 선점하는 동시에 해외진출 전진기지 조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물산업 첨단화 및 유망 중소기업의 지속적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물산업 중심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천519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오는 2017년까지 추진된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도시 대구를 만들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도시철도 스크린도어(PSD)를 설치하고 안전·안심소재 부품산업 글로벌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윤정현 편집위원

2015

165조원 들여 일자리 22만개 창출한다
산자부, 지역발전 5개년계획 확정 발표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사업비 16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및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 추진

산업자원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별 대표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22만개를 창출하고 생산액을 286조원 늘리는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체계 개선 등 5대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전체 예산의 109조원(66.2%)을 국비로 충당하고 지방비와 민간투자도 각각 40조원(23.9%), 16조원(9.9%)씩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이번에 내놓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만든 지역발전 중기 종합플랜으로, 중앙부처는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 17개 시·도는 시·도별 생활권 및 5대 분야별 시·도 실천과제와 핵심성과지표 등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이다.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은 지난 2004년과 2009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89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사업은 큰 틀에서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행복 증진에 필수적인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마을기업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동시에 농어촌 상하수도 확대 및 생활공원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65%선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을 80.5%까지 끌어올리고,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해져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선 지역 대표산업의 일자리 22만 개를 창출하고 투자 선도지구 14곳을 신규 지정하는 한편 25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는 등 지역단위 경제 및 산업 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선 지역의 초 · 중 · 고교 및 대학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적 구조로 재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성화 전문대학을 100곳 이상으로 늘리고 행복학습센터 200여 곳을 신규 설치하는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을 위해선 지역의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해 문화도시 15곳과 문화마을 50곳을 조성하는 등 브랜드 있는 지역으로 육성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각 없는 지역 복지 · 의료를 위해선 전국 어디에서 살든 기본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의료 인프라를 확대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구, 남부경제권 창조경제 중심도시로 육성

이번에 확정 · 발표된 지역발전계획에는 전국 17개 광역시 · 도별로 해당지역의 비전 및 잠재력을 기반으로 세부 실천과제와 공간발전구상을 함께 제시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의 경우 '남부경제권 창조경제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지역 내 29개 대학과 교육학술기관 등을 집적화하고 주력산업과 신산업 융합을 통해 남부경제권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생활권 1곳을 조성하고 기계, 섬유 등 주력사업과 로봇, 의료 등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컬처노믹스 실현을 통해 문화복지교육분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화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SW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8천566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도 함께 창출하기로 했다.

동대구벤처밸리를 조성하고 창조경제타운 중심의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경부산업축과 낙동강산업축을 중심으로 주력 및 신성장산업은 물론 R&DB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실행계획도 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창의혁신인력 2천50명을 양성하고 신규 일자리 1천695개를 창출하는 한편 대구의 GRDP를 37조6천100억원까지 확대하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환동해시대 선도 글로벌 창의경북 실현에 주력

경북지역 발전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동해시대를 열어가는 글로벌 창의경북 실현'을 통해서다. 경북도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자 환동해권 중심 지자체로서 양질의 산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과 함께 고속교통망 기반의 우수한 투자여건을 보유한 점을 잠재적 경쟁력으로 정부 측은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농 · 어 · 산촌 행복체감형 생활공동체를 실현하고 차세대 원자력융복합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경북형 첨단 경제엔진을 구축 ·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생활권은 안동중추도시권과 경산 · 영천 · 청도권, 의성 · 군위권, 영덕 · 영양 · 울진권 등 도내에 9곳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경북지역에 IT융복합 창조생태계 구축을 통해 6천800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생산유발효과 5조5천204억원을 실현하겠다는 밑그림도 내놓고 있다.

지역별로는 큰 틀에서 4대 권역으로 나눠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환동해 해양신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북부권의 경우 미래농생명산업벨트로, 서부권과 남부권은 각각 스마트융복합벨트와 창의지식서비스벨트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양광석 산업부 지역위협력팀장은 "이번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전국을 쾌적한 삶터, 꿈이 있는 일터, 즐거운 쉼터로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추진체계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 평가를 거치는 등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배은정 기자

2015

대구 도시계획용도지역 전면 재검토 필요성 공감대 확산

장기 불황 늪에 허덕이고 있는 대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불합리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도시계획상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해해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대구 녹지비율 전국 대도시 중 최고 수준

대구는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녹지지역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한다. 지난 2013년 기준 대구의 도시지역 비중은 전체 면적의 90.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녹지지역은 전체 도시지역의 70.1%로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국 7대 도시의 평균 녹지지역 면적은 49.3%에 그친다. 대구의 경우 타 도시에 비해 도시계획용도지역 조정 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구의 용도지역 면적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중 녹지는 전체 면적의 70.1%인 631㎢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반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각각 116.9㎢, 32.6㎢, 17.6k

㎡에 그치고 있다. 지목별 토지이용 구조를 살펴보면 임야가 482.90k㎡(54.64%)로 가장 많고, 답과 대지는 각각 92.30k㎡(10.44%), 78.10k㎡(8.83%) 규모로 파악된다.

"용도지역 완화위해선 산적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용도지역 조정에 나서야한다는 공감대가 최근들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 대구의 경우 타 도시에 비해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치를 높게 적용하고 있는 나머지 추가적인 용도지역 완화 조치를 취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용도지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교하지 못하고 단순한 탓에 토지관리 용도로 효과가 미비하다는 데 있다고 한 목소리로 입을 모은다. 용도지역에 의한 용적률 또한 실제 실행되는 것보다 허용 폭이 지나치게 큰 나머지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현행법에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용도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은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는 물론 각종 비리 발생 우려를 염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됐으며,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의 핵심적 관리 수단으로는 용도지역제와 지구단위계획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중앙 정부와 긴밀한 협조 속 효율적 도시정책 추진이 관건

전문가들은 대구의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앙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한데 모으고 있다.

중앙정부는 도시계획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지침 작성을 위한 협의주체로 참여하되 관련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관련 용도지역 지정 및 용적률 운영지침 작성과 같은 세부적 내용에 대해선 이를 광역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해야한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필요 시 광역지자체가 직접 발의하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도시계획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분류 체계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관련 법률상의 유사용도별 기준을 상호 유기적이면서도 보완적 관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편돼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상 도시계획 체계는 당분간 유지하되 장기적 안목에서 지자체의 행정구역 대상의 공간계획 등에 대해선 재조정하고 기타 계획 또한 지역 및 부분별로 통합해야한다는 주장도 지역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다.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노력도 함께 펼쳐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계획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선 지자체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견해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등에 도시계획위원 추천권을 배분하는 한편 전문가 및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노력을 적극 펼쳐야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지방의회 동의권과 자치단체장 재의요구권 등을 활용하고 계획 수립 부결 시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안 모색을 위한 조정신청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논리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 노력도 적극 기울려야할 것으로 진단된다.

도시계획 수립 및 고시 내용 등에 대해선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시스템을 활성화해야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 사회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각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기구 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지난해 6·4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행 용도지역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권 시장은 당시 용도지역을 전면 재조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기간 7~8년 정도면 25조~36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일자리 26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등 2012년 기준 대구의 GRDP 38조7천500억원의 32.7%에 해당하는 경제적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

권 시장은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시 공간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 점검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민선 6기 임기 중 관련 공약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은정 기자

경북도,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농촌경제 살린다
농업 6차산업화 '잰걸음'

경북도가 농업의 2 · 3차 산업 융 · 복합을 통한 농업 6차 산업화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역농촌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경북농업 6차산업 활성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초기 · 성장 · 안정화 단계별로 3대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6차산업화 선도모델 250개소 발굴 · 육성과 집적화단지 5개소를 조성해 성장뿌리를 견고히 하고, 고령농가, 여성 등을 위한 농촌지역 일자리 2천개, 부가가치 1천억원 창출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했다.

경북농업 6차산업 활성화 기본구상을 마련한 후 농업인과 관련 기업체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도내 권역별 설명회 등에서 도출된 현장 의견을 반영, 이를 위한 확정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고령화 및 탈 · 이농현상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농촌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농업소득 또한 최근 10년간 지 ·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감안해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농업을 가공과 유통, 관광 등 2, 3차 산업과 연계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한 10대 중점 실천과제는 △농업경영체 내재적 역량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사업 창업화 지원 △유형별 모델발굴 지원 △공동체 주도 △단계별 산업화 지원 △6차 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6차 산업화 사업자 인증 추진 △우수 경영체 행 · 재정적 지원 △안정적 소득 창출 △홍보 · 마케팅 지원으로 요약된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6차 산업의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시행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기업 경영체가 쉽게 식품제조 및 가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가단위 가공업 육성을 위한 시 · 군별 조례 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 영세 업체의 초기 부담 완화를 이끌어내고 시제품 생산과 기술 습득 등 사업화를 가능토록하기 위해 농산물종합공동가공센터를 오는 2018년까지 도내에 10곳까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농산물종합공동가공센터는 3곳에 그치고 있다.

경북도는 특히 그동안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공동체 주도 소득 육성 및 마을단위 체험관광사업을 유형별로 체계화해 경북형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 보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소득원 확충을 통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6차 산업 추진 경영체의 안정적인 활착 방안에 대해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 우수 경영체에 대해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를 추진해 매출액,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관련 성과를 주기적으로 관리 · 평가하고 연구개발(R&D) 및 저리 금융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웅 경북도 농축산국장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침체된 농촌 공동체를 회복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행복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준 편집위원

STAR
Yeong Cheon

말과 함께 경북 영천이 뛰네!

국제 규모
영천경마공원

| 인터뷰 | 이재훈 제6대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컨트롤타워 역할 차질 없이 수행할 터”

경북테크노파크가 조직 내부에 혁신을 불어넣고 있다.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 경직성에서 탈피한 유연한 조직을 만드는 이른바 ‘아메바경영’을 통해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체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기업지원기능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지역 기업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업지원 허브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경북TP 변화의 중심엔 지난해 9월 취임한 이재훈 원장이 서 있다. 경북지역 기업들이 지속성장 가능한 영속적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한마음 한뜻이 돼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각오다.
이 원장은 “지역기업들이 경북테크노파크가 경북에 반드시 있어야하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북경제 발전을 위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Q 취임식을 별도로 갖지 않으셨다면서요?

A 간담회 형식으로 직원들과 회의하듯 조촐하게 가졌습니다. 초청인사는 단 한명도 없었고 플래카드(Placard) 등 내부 장식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지원 허브 기능을 맡고 있는 테크노파크(techno park)란 기관 자체가 지역사회에 봉사해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화려한 취임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화한을 보내주시려는 분들에 대해선 그 성의가 있으니 정중하게 쌀 화환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쌀은 아동복지시설에 전량 기부했습니다. 취임식 때 보내주신 꽃 역시 내부 직원들이 기부금을 내고 가져갔고, 전액을 지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습니다.

Q 취임식 당시 새 미션을 선포했다면서요?

A 경북테크노파크의 이니셜인 GBTP를 새롭게 패러디해서 미션 ‘Great Business and Talent with Passion’을 제시했습니다. 사업 성공과 열정을 가진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테크노파크의 핵심 역할은 두말할 것 없이 지역기업 지원 기능입니다. 구성원들이 열정을 가진 역량있는 인재가 되어야 만이 제대로 된 기업지원에 나설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이 중심이 된 중앙 정부차원의 수많은 관련 사업이 있고 지방의 경우 테크노파크가 기업 지원과 관련된 모든 사업의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이런 관점에서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은 물론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혼신의 힘을 쏟는 동시에 적시에 기술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등 기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선 역량을 갖춘 열정있는 직원이 반드시 필요한 데, 역량함양 · 주인의식 · 윤리교육 등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Q 취임식 때 직원들에게 어떤 점을 강조하셨는지?

A 소명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북지역 기업들이 지속성장 가능한 영속적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조직 운영 방침으로 아메바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아메바 경영의 핵심 가치는 직원 각자가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유연한 팀을 이루고 업무를 자유자재로 맡을 수 있는 분화된 조직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칸막이에 갇히지 않고 형식과 틀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팀이 되고 분화되는 조직을 구성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메바 경영은 일본 교세라 창업주인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이 창안한 경영철학입니다. 아메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선 구성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고의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갖춘 다음 구성원간 신뢰 구축을 통해 주어진 업무에 따라 팀을 자유자재로 조직하는 게 아메바 경영의 지향점인 셈입니다.

이를 위해 경북테크노파크의 경우 주간회의에서 직원 간 업무를 공유한 뒤 특정사안에 대해선 관련 팀을 모아서 하나의 태스크포스(TF)팀을 조직하고 유연하게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조직으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 경북 경제를 진단한다면?

A 경북경제는 큰 틀에서 전자, 기계, 금속 중심의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자는 구미, 기계·금속은 포항, 경주, 영천, 경산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4년 연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늪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고 디플레이션 압박도 한층 고조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삼성전자, LG,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매우 높은 나머지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강소기업을 키워낼 때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은 아울러 경제 여건 상 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업 경쟁력 확보 노력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북의 경우 농업종사자 및 생산규모 등의 측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산업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IT 및 바이오기술 등을 접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힘을 모아야할 것입니다.

3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경북은 3차 산업 경제비중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60%대에 그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음식 및 숙박업 중심이어서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점도 해결해야할 숙제로 여겨집니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용어로 지식집중비즈니스서비스(KIBS)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론 제조업 컨설팅을 비롯한 엔지니어링, 플랜트 수출, 기업지원서비스, 특허출현 등이 이 경우에 속합니다. 무엇보다 지식집중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면 지역의 영세 자업자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일궈낼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됩니다.

Q 경북은 고령화률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데요. 이에 따른 각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A 경북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고령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고령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정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와 병행해 고령자들의 거주지를 집단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집단 거주지역을 만들어주면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내 시골지역의 경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탓에 개별 가구 난방 시 연료비용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절약 문화가 생활 습관화된 나머지 심지어는 난방비마저 아끼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을 위한 집단 거주지역을 만들어 도시가스를 공급해준다면 난방비 절감은 물론 감기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 의료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성이 아닌 정주형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고령자 집단 거주테마파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집단 거주지역은 반드시 시·군별로 병원 인근 지역에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선 김천, 안동시장님과 일전에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해당지역의 대형병원 인근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소형 임대 아파트 건립에 나서달라고 조언했습니다.

Q 글로벌 경제를 진단한다면?

A 글로벌 경기회복은 현재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L'자형 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독일 경제조차도 최근들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은 양적완화 축소 및 중단에 이어 금리 인상 초읽기에 들어갔고, 중국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한편 일본은 전례 없는 양적완화 및 엔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외 여건은 그야말로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내수 진작책도 효과를 그다지 크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완화 및 기업의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게 골자이지만 약발은 부동산경기가 미비하게 살아나는데 데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경기는 앞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컨대 미국이 예상대로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소위 말하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들이 속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주택매입의 실수요자는 줄어드는데 반해 주택공급 과잉 및 가격상승에 따라 거래 실종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우스 푸어들이 금융권 대출 이자 인상으로 주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데 힘을 모아야합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아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경기주기를 살펴보면 3년 성장, 17~18개월 침체기를 밟아왔는데, 올해부턴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업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 국면에 빠져들 공산이 매우 큽니다.

Q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어떤 업종이 적합하다고 여기시는지?

A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수시장 활성화만으론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한계가 따릅니다. 결국 수출 중심국가가 되어야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잔뜩 움츠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 역시 과거와 같이 특정업체에 밀어주기식 경제정책을 펼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섬유가 어려웠을 때 70년대 말 백색가전이 뒷받침 되어줬고, 이어 반도체가 견인했으며,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위기의 한국 경제를 견인할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전기자동차에 눈을 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에 알맞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후방 소재부품산업이 발달한 이유에서입니다. 관련 기업들이 전기자동차 시장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입니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쪽이 맞다면 확실히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Q 유사기관 통합을 통해 경북테크노파크가 기업지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서요?

A 경북테크노파크는 올초부터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그린카산업진흥원, 천연염색연구원을 통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경북지역 대표 기업지원기관으로 재출범하게 됩니다. 각 기관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지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플랫폼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에게 정부 제공 기업지원사업 수혜는 물론 연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사업을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경북지역 기업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업지원 허브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Q 경북테크노파크의 기업 지원 분야는?

A 업종과 관계없이 연구개발(R&D) 및 비(非)연구개발분야는 물론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선 창업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층 및 여성창업, 베이비부머 세대 창업 등 성별과 연령대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교수진을 비롯한 연구원 및 기업인들이 멘토로 참가하는 Tripod Partnership을 구축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가족기업승계지원사업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수많은 맛집과 특정 분야에 재능을 가진 장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가업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나머지 자식들에게 승계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장인정신과 마이스터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가업승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Q 끝으로 경북테크노파크를 어떤 기업지원기관으로 만들고 싶으신지?

A 우선 지역기업들이 경북테크노파크가 경북에 반드시 있어야하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어 하는, 외부에서도 (경북테크노파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업지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과 소통문화 정착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경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글 | 서기대 편집장
사진 | 김원현 기자

TP 거점기능 강화·창조적 혁신기술 지원 주력
경북TP, 올해 중점 추진 전략 발표

경북테크노파크가 2015년 올 한해 테크노파크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창조적 혁신기술 지원에 주력하는 동시에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북TP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중점추진 과제 및 사업방향' 자료를 최근 발표했다. 3대 전략과 7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기업 지원 허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기업 지원 허브기능 강화

경북TP는 우선 올해 중점 추진 3대 전략을 △경북TP 거점 기능 강화 △창조적 기술혁신기능 집중 육성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으로 삼았다. TP 거점기능 강화를 통해 기업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창조적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북TP는 올해 중점 추진 7대 핵심과제에 대해선 △선순환적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기획 전문성 확보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 증진을 위한 허브기능 강화 △제조업과 ICT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동력화 △비즈니스 플랫폼 기능 내실화와 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 △고용 창출형 창업지원사업 집중 추진 △임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조직 슬림화·윤리참여 및 열정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구축으로 요약된다.

기업과 TP 공존하는 상생협력사업 확대

경북TP는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선순환적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기획 전문성 확보 방안과 관련, 경북산업정책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차별화 과제기획을 통해 지역 착근형 대형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각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증진을 위한 허브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혁신 주체간 연계 강화를 통해 공존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기업중심의 산 · 학 · 연 · 관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경북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의 인식확산을 주도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기업과 TP가 공존하는 상생협력관계를 확산시키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경북TP는 이와 함께 ICT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동력화를 위해선 주력 및 협력산업의 융합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및 비R&D과제 기획에 힘을 모으는 동시에 지역의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이 경북 대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경우 제조업 기반으론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역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경북TP가 주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전통 제조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을 먹여살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즈니스 플랫폼 내실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해선 지원기능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기업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원기능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가족기업승계지원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가족기업승계가 원활한 편인데 반해 서비스산업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을 감안해 해당 경영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가족승계를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 가족기업승계 및 사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경북TP는 이와 병행해 고용 창출형 창업지원사업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과 대학, 기관 간의 인력부문 연계 활성화를 기반으로 현장 숙련 인력의 적시 공급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청장년 창업과 교수 및 전문가와 연계한 창업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으로도 풀이된다. 여기에다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 강화 노력도 적극 펼칠 방침이다.

직원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자생적 학습조직 구축에 나서는 한편 직무교육과 학습조직 기반의 혁신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인재가 곧 경쟁력'이라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조직 내부에 혁신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업지원기관 통합 · 운영 효율성 극대화 '눈길'

경북TP는 올초부터 본격적으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그린카부품진흥원,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통합, 몸집을 키우는 등 명실상부한 경북을 대표하는 기업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 복수의 기업지원기관을 한데 통합하는 것은 중복투자 병폐를 줄이고 조직 슬림화 및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직개편을 통한 시스템화를 유도하고 인사, 총무, 재무, 기획 등의 지원부문 유휴 인력을 사업파트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생산적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하는 동시에 영속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뜻으로도 이해된다.

경북TP는 이와 함께 성과에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을 세우고 성과중심의 근무평가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재훈 경북TP 원장은 "지역 기업들이 반드시 경북테크노파크가 경북에 존재해야한다는 데 공감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허브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아메바 경영을 통해 틀에 갇히지 않은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직원 대상의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기업지원과 관련된 전문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기대 편집장

경북TP, 명실상부한 경북지역 대표 기업 지원 허브기관 자리매김

경북테크노파크가 명실상부한 경북지역 대표 기업 지원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영속적 기업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결과물로 판단된다.
경북지역 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 혁신 거점 기능을 무난히 수행해내고 있다는 평도 지역 사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경북TP의 기업지원서비스는 지난해 9월 이재훈 원장 취임이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양질의 기업지원서비스를 토대로 기업이 행복한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겠다는 게 궁극적 목표다.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 기여 목적으로 1998년 설립

경북TP가 설립된 것은 지난 199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9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시범TP에 선정된 지 8개월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전국 18개 지역에 들어서 있는 테크노파크는 산 · 학 · 연 · 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기술집약적 기업 육성에 주력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경북TP는 지난 2000년 현(現) 산업통상자원부 전신인 산업자원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2004년과 2009년에도 각각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연구지원기관 부문 국무총리상과 경북도 연구기관 업무실적평가 부문 최우수 기관 영예를 안는 등 정부 및 경북도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사업 추진을 위한 첨병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2005년 글로벌벤처동 조성에 이어 2010년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 2013년 그린마인비즈니스센터 개소식과 첨

단메디컬 융합섬유센터 기공식을 각각 가진 것은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포석으로 비춰진다.

국비지원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첨단메디컬 섬유소재 기술개발주관기관과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기관에 지정된 것을 비롯해 대경권 식물공장 및 원전기자재 종합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지원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는 등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거점기관으로 확고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생산적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차별화 기업지원서비스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에 나서는 한편 비즈니스 플랫폼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 창업지원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함께 펼쳐 눈길을 모으고 있다. 아이디어 누적 건수 127건에 이어 예비 창업자의 창업 달성률 91%를 기록하는 등 창업지원사업은 최근들어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경영혁신 노력도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한층 확연해진다.

경북TP에 따르면 설립 이듬해인 99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 기업 지원건수는 무려 3천345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경북TP에 입주한 기업 1천147곳에서 6천343명을 고용했으며, 이들 기업의 매출액만 6천803억4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도 무난히 수행해내고 있다. 같은 기간 경북TP의 지원을 받은 지역 기업의 총 매출액과 고용인원은 각각 27조2천557억5천500만원, 9만5천30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지원 성공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01년 신규 창업을 지원한 (주)제닉의 경우 연매출 1천억원 규모의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 성장해 동종업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경북TP의 주요 성과물은 큰 틀에서 △지역 맞춤형 신성장 동력 발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강소기업 육성 △창조경영 체계 확립으로 압축된다.

이재훈 원장 취임 후 창조경제 확산 주력

경북TP의 차별화 기업지원사업은 지난해 9월 이재훈 원장 취임이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최고수준의 기업지원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업이 행복한 산업 생태환경 구축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게 뼈대를 이룬다. 경북TP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뉴(New)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열정과 최고의 기업지원서비스로 기업 행복과 창조경제를 선도한다'는 내용의 새 미션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K-1 경북행복 프로젝트의 드라이버로서 GBTP'란 새 비전도 공식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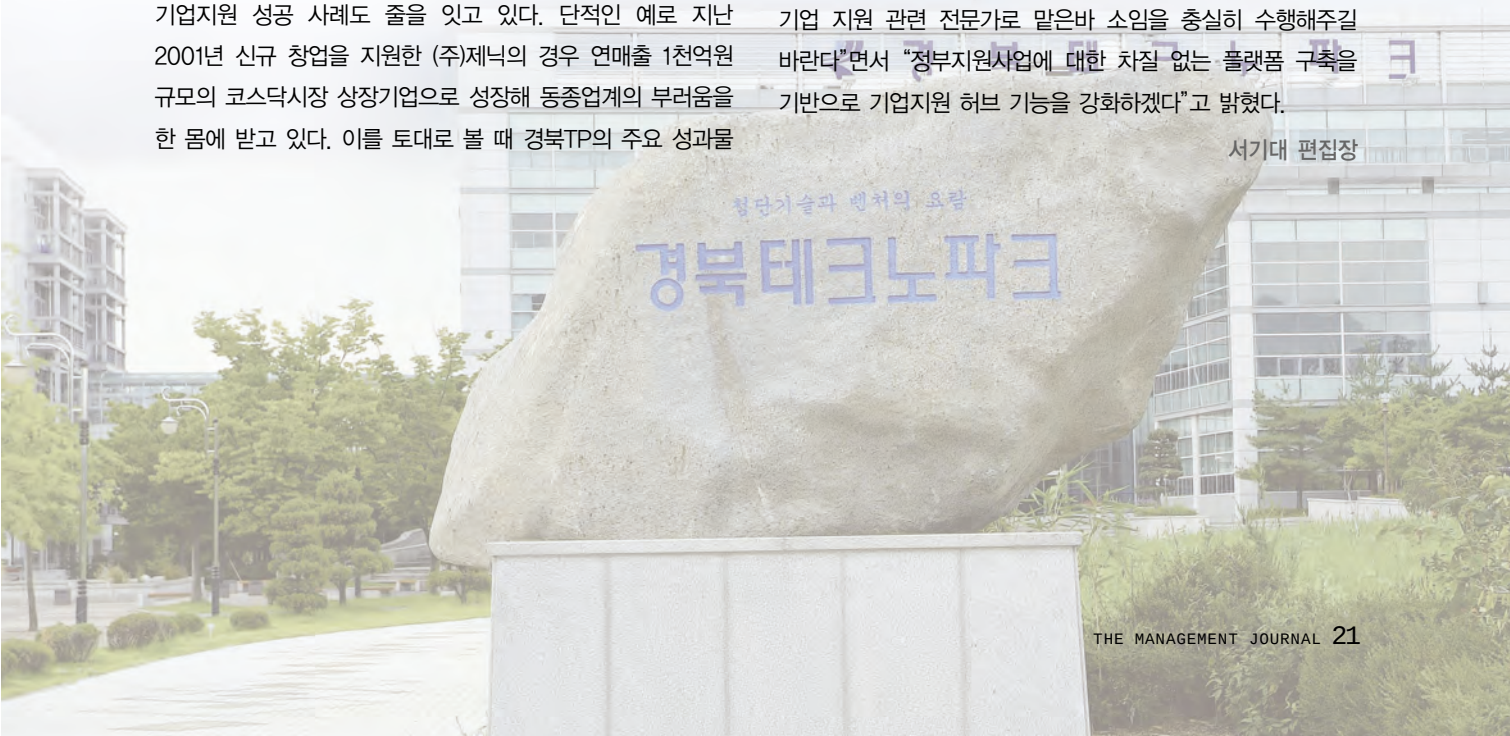
경북TP는 이에 따라 역점사업으로 경북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내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북지역 23개 시·군과 4대 권역별로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별 맞춤형 산업 활성화 계획을 실천하는 등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창조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지원기업 매출 5조원 달성과 함께 신규 일자리 1천500명 창출을 골자로 한 창조적 산업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을 둔 경영 혁신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조직문화 구축 방침도 내놓고 있다.

이재훈 경북TP 원장은 "직원들이 소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 지원 관련 전문가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바란다"면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플랫폼 구축을 기반으로 기업지원 허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기대 편집장



이재훈 원장은 누구인가?

자타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 산업 · 경제 · 정책 전문가

제6대 이재훈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대구 · 경북을 대표하는 경영학자이자 산업정책 전문가로 주저 없이 꼽힌다.

지역 사회 안팎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대구 · 경북경제를 가장 잘 아는 산업경제통으로 통하는 인물이 바로 그다. 그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영남대와 서울대, 미국 코넬대에서 각각 학 · 석 · 박사 학위를 받은 이 원장은 현재 영남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는 등 대학 강단에서 후학 양성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박사 학위는 조직행동학으로 받았다.

영남대에서는 대외협력처장과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원장, 글로컬사업추진단장을 역임하는 등 굵직한 대내외 업무를 맡아 학교 발전에 이바지했다. 경북TP 수장이 된 것은 이 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경북TP 사업단장을 맡아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열정을 불태웠다.

경북TP가 지금과 같이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는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 인물이라는 평도 나온다. 왕성한 대외활동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소기업분과위원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분과장을 맡아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21일 열린 제31차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총회에서 (사)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회장에도 선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국 18개 테크노파크를 대변하는 핵심 임무를 맡은 것이어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국 각 지역사회와 소통 및 화합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거점역할을 테크노파크가 맡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8개 테크노파크를 정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회의체 운영 및 공동행사 개최, 한국형 테크노파크 글로벌화 및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등을 통해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 테크노파크 간의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인간적 면모에 대한 주위 관계자들의 찬사도 쏟아지고 있다. 그의 성격은 진솔함과 소탈함, 그리고 겸손함으로 압축된다. 권위의식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지난해 9월25일 열린 제6대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취임식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이 원장은 당시 GBTP(Gyeong-Buk Technopark: 경북테크노파크)의 새 미션으로 GBTP(Great Business and Talent with Passion: 참여기업들의 성공과 열정을 가진 멤버들로 구성된 조직)를 제시하면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것으로 공식적인 취임식을 대신했다.

사실상 3개월 이상 이어진 원장 부재로 인한 경북테크노파크의 산적한 업무를 감안해 전 직원들과 간담회 형식의 소통과 상호학습을 통한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전념하기 위해 취임식을 별도로 갖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서기대 편집장

입장 및 주차 무료

소싸움도 경마처럼

넘치는 힘! 청도소싸움!!

12월 13일 개장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청도소싸움경기장으로 오십시오~!

매주 토 일 12경기 개최

Cheongdo Bull Fighting

청도공영사업공사

경북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로 348

Tel. 054)370-7500/7503

www.sossaum.or.kr

자동차 튜닝산업, 대구 · 경북 창조경제 견인 핵심 사업군으로 급부상

최근들어 자동차 튜닝산업이 대구 · 경북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 사업군으로 급부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산업이 발달된 지역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튜닝산업 육성 시 시너지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씩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산업 육성 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튜닝산업 발달 위한 입지적 장점 뛰어나

대구 · 경북은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자동차 부품산업이 발달한 입지적 장점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대구 · 경북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수는 전국의 18%인 670여개로 파악된다. 종사자 규모 또한 2만4천여명으로 전국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자동차 튜닝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R&D)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것도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ITS부품시험장을 필두로 자동차부품연구원대구경북본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한데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파워트레인 및 차체업체 등 자동차 튜닝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 입주 비중이 전국 주요 도시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서다. 관련 연구기관은 물론 소재산업이 잘 형성돼 있는 만큼 튜닝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튜닝업체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대구지역에선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을 중심으로 100여 업체가 영업중인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이 가능한 정비업체 또한 1천700여개에 달하며, 종사자수는 5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의지도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나서는 등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현(現)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적합 산업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튜닝산업 고부가가치 산업군 급부상

현재 국내 튜닝산업은 자동차 부품 애프터서비스(A/S)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유망 성장산업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고부가가치 기반의 경량 및 융합화가 가능하고 브랜드 튜닝 등을 기반으로 고객 니즈가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향후 전망도 밝아 보인다. 글로벌 튜닝산업시장은 현재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독일 등 자동차 강국이 선점하고 있으며, 연 평균 5%씩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국가는 F1 서킷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관련기술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5천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최근들어 정부에서 자동차튜닝 활성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관련 시장은 빠른 속도로 커질 전망이다.

큰 틀에서 튜닝은 자동차 성능 향상과 외관 단장을 위한 구조 및 장치 변경과 부착물을 추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자동차 튜닝산업은 관련 부품의 연구개발을 비롯해 제조 및 판매, 서비스 등이 결합한 형태의 제조사와 판매사,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특성을 지닌다.

연구개발(R&D) 강화 등 통해 차별화 경쟁력 확보해야

대구 · 경북의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위해선 전 · 후방 연관산업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조기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자동차 튜닝 부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후방산업인 소재가공산업뿐만 아니라 튜닝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레저 및 디자인산업 등 전방산업과 조화를 이룬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우수 인력 육성에 지속적으로 나서는 한편 대구자동차튜닝산업 활성화 진흥조례 제정 등 튜닝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힘을 모아야할 것으로 진단된다.

기술개발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 앵커시설인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관련 유관기관에서 구축한 인프라 및 기술을 적극 활용, 범용적 범위에서 벗어나 파워업(Power-up), 퍼포먼스-업(Performance-up), 드레스-업(Dress-up) 분야의 핵심 아이템 개발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는 튜닝카바타 서비스 및 튜닝지원 장비 구축 등을 통해 튜닝업체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자동차 튜닝 수요 확산을 위한 핵심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 관련 산업 활성화 의지도 확보해 보인다. '튜닝부품 개발서비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강점산업인 자동차 부품소재산업과 연계해 튜닝산업을 지역을 대표하는 창조경제 핵심 사업군으로 육성할 방침"이라면서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가 발달해 있는 대구 · 경북은 이를 위한 최적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배은정 기자

정영길 제10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농·어업인 대접하고 중시하는 농도 경북 실현 위해 매진할 것”

정영길 제10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51)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이른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제9대에 이어 재선 광역의원인 정 위원장은 현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이끌면서 ‘경북 농·어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농·어업인을 대접하고 중시하는 농도 경북 실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농·어업인들의 소중한 땀의 결실 덕분”이라면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우리 농촌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Q 베이비붐 세대 등을 겨냥한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A 귀농·귀촌자는 큰 꿈과 희망을 갖고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보이지 않는 커다란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도시민들이 그 만큼 많다는 얘기다. 농업이 예전과는 달리 산업화되다보니 그분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안착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게 현실이다. 귀농·귀촌 초창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배를 위해선 시설비 내지 생산비가 많이 소요되는 현실의 벽에 막혀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자주 들린다. 아울러 현지 주민들과의 이질감 및 괴리감으로 인해 좌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선 지자체의 세심한 배려와 함께 행정적 지원책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본다.

귀농·귀촌 적합지임을 강조하는 식의 지자체 홍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뜻이다. 귀농·귀촌 후 마을 주민들과 마찰없이 더 이상 변방인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초기 정착지원금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영농기술지원 등을 통해 귀농·귀촌 후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줘야할 것이다. 사실상 귀농·귀촌은 선을 구별하기 애매모호할 때가 많다. 귀농은 생업 차원이고 귀촌은 노후생활 목적이 강한 게 근본적인 차이인데, 지자체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 짓고 맞춤형 지원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Q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선?

A 농작물재해보험료는 현재 경북도와 시·군, 그리고 농협이 매칭해서 지원해주고 있다. 농민 부담도 일부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농업인 부담을 지금보다 대폭 경감시켜 줘야할 것이다. 농업인들이 보험료 납입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실질적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경북도의 경우 최근 지원금을 일부 상향 조정했지만 개인적으로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본다. 최소 10% 이상까지 부담금을 끌어올려줘야할 것이다. 현재 대상 품목은 경북도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상태다. 최근들어 돌발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큰 폭으로 늘어난 추세인 것을 감안할 때 농작물재해보험은 피해를 본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물이든지 농작물이든 피해를 입을 시 최소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보장성 지원책이 바로 농작물재해보험이라는 얘기다. 일부 농업인들의 경우 당장의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이야말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Q 본격적 FTA시대를 맞아 농 · 어업 육성책에 대해선?

A 최근들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 소식이 잇따르면서 농 ·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당장 수입 농 · 축 · 수산물이 범람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에선 늘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농업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난 93년 우르과이라운드(UR) 협상을 시작으로 농 · 축 · 수산물 시장 개방의 역사는 어느새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농 · 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대책은 전반적으로 부재한 게 현실이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농업정책을 가지고 당근책 제시에만 열중했을 뿐 농 · 축 · 수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한 실질적이면서도 실효적인 대책은 미비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농 · 어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역이득공유제를 하루빨리 통과시킨 후 시행에 들어가야한다고 진단된다. 자동차, IT, 기계류 등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 쪽에서 손해를 보는 농 · 어업 종사자 등에게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바로 무역이득공유제다. 거듭 강조하지만 조속한 국회통과를 바랄 따름이다. 이와 함께 농 · 어업인들 의식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관(官)에서 펼치는 행정적 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고 자생력을 키워야한다.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선심성 행정 내지 각종 보조사업 명목으로 지원을 확대하다보니 농 · 어업인들이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많이 상실한 게 현실이다. 선출직 단체장, 국회의원, 기초 · 광역의원 모두가 반성해야한다. 결국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과 기술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관련 정책의 대변화가 필요하다.

Q 경북농업의 위상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A '경북농업'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웅도 경북, 농도 경북'이란 슬로건에도 그 뜻을 잘 함축하고 있다. 실제로 경북은 단일 품목 기준으로 전국 1위 농 · 축 · 수산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예컨대 한우, 사과, 참외 등은 명실상부한 시장 점유율 1위 농축산물이다. 참외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80%가 경북산(産)이다. IT, 철강 등 '경북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산업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농 · 어업이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웅도 경북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북인(慶北人)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웅도 경북을 외칠 수 있는 동력도 생명산업인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농 · 어업인을 대접하고 중시하는 농도 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Q 살기 좋은 농 · 어촌을 만들기 위해 제안한다면?

A 소위 말하는 백화점 나열식으로 보조해주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선 기존의 틀을 대폭적으로 바꿔 나가야한다고 본다. FTA시대를 맞아 농 · 어업 환경은 최근 들어 급변하고 있다. 시대 패러다임에 맞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하다는 얘기다. 지자체에서 잘 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부진 내지 중복성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야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셈이다. 현(現) 정부의 역점 농정정책은 농업의 6차 산업화로 요약된다. 단순한 농작물 판매가 아닌 가공 및 관광 상품화 기반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해 우리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어야한다.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혼신의 힘을 쏟을 작정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농 · 어업인들의 소중한 땀의 결실 덕분에 가능했다. 농 · 어업인들과 힘을 합쳐 FTA 등 대내외 악조건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동시에 농 · 수산물 수출 확대 및 6차 산업화를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 개인적으로 경북 성주군 토박이다.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누구보다도 우리 농촌과 농업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농 · 어업은 가장 힘든 노동력이 필요한데 반해 종사자들은 그 대가로 행복감이나 성취감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주소다. 농 · 축 · 수산물 개방화 가속화에 따라 이런 현상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농도 경북을 실현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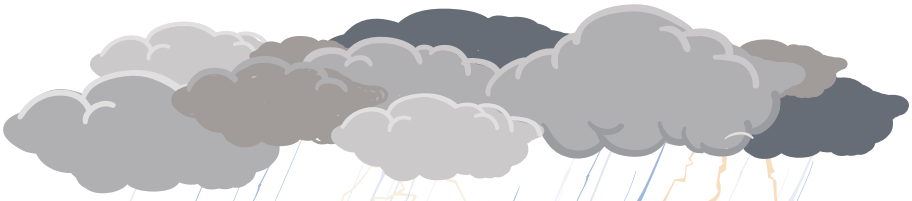
Q 끝으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지난 2006년 제5대 성주군의원에 이어 제9 · 10대 재선 경북도의원으로 뽑아주신 지역구 주민, 성주군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성주군 제1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무투표 당선의 영광도 안았다. 기쁨 마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하는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기초의원 시절부터 재선 광역의원인 지금까지 변함없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철저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초 · 광역의원이란 신분은 결단코 주민 위에 굴림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심부름꾼이자 봉사자란 소명감을 갖고 늘 낮은 자세로 주민들 곁에 다가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일꾼, 주민들을 보듬고 소통하는 참일꾼이 되겠다.

서기대 편집장



농작물재해보험 내실화 통해 농가 경영 안정 도모해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지역 농촌사회 안팎에서 광범위하게 일고 있다. 현행 농가 지원책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농가 이해도 미흡은 물론 지역별로 보험 가입 편차가 심한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적잖게 노출하고 있는 만큼 내실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기상이변에 따른 농가재해 빈번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이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재해 발생은 최근들어 빈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정은 경북도도 마찬가지다. 2006년부터 지난 2013년까지 최근 8년간 풍수해 및 우박,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북지역의 농작물피해 규모는 연평균 1만9천ha로 집계되는 등 농가 피해가 숙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재해의 근원적 문제점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히면서 농가 경영에 막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하는데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까

지 걸리는 등 농가 경영에 치명적 위험요소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주안점을 둔 지원책을 펴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실손 보장해줌으로써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은 사과, 배, 벼 등 40여 품목에 달하는 가운데 보험 가입 농가수도 최근들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대폭 늘리면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반 보험과 달리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 시 정부에서 보험료 50%를, 아울러 지자체에서 25%를 추가 부담해 줌으로써 농가 부담액은 전체 보험료의 25%선에 그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도 농가 반응은 호의적이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북지역 농가는 전국의 24%인 2만2천866가구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지면적과 보험료도 각각 전국 3위와 1위 규모인 1만8천557ha, 864억2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험 가입 농작물 품목별 편중 심화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물론 품목 및 지역간 보험금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는 만큼 이를 서둘러 개선해야만 제도 도입의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품복별로 사과와 배, 시설참외를 제외한 나머지 농작물의 가입률은 1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컨대 포도와 고추 품목의 가입률은 국내 전체 재배농가의 5.1%와 3.8%에 그치고 있으며, 복숭아 또한 13.4%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등 과수 품목 중심으로 농작물재배보험가입이 집중되면서 보험금 지급 지역도 편차가 심해, 경북지역의 경우 사과 주산지인 청송군이 154억원을 지원받은 데 반해 과수 품목이 거의 전무한 울릉군은 고작 3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관련 지방비 지원액은 도비 43억원, 시·군비 173억원에 각각 달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가 홍보 및 국비 지원액 상향 노력 절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선 시스템 구축화 등 내실 강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한

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작물 품목 및 지역별 재해 통계 체계화 노력과 함께 농업 재해와 관련된 조사연구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농가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과 함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도 병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농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에 나서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조례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해 농가 지원근거를 마련해야해야한다는 것이다. 국비 지원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치단체의 재원 마련 어려움을 감안해 국비 지원율을 대폭 높여 줘야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출연기관 한 관계자는 "농가 보험가입을 늘리고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국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한다"면서 "관련 재원 확보 방안으로 건설업체 등에서 자연재해로 발생한 시설 복구를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전액을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은정 기자

국내 600대 기업 설문
“우리 경제 올해 부진 지속 전망 우세”

국내 기업 상당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올 한해 부진 국면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국내 업종별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경영환경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329개사)의 81.6%는 현(現)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제조업 및 수출의 구조적 위기’라고 답변한 반면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일시적 하방 리스크’ 나 ‘경기 회복 국면에 지장 없음’이란 긍정적 의견은 17.8%에 그쳤다.

국내 기업 열 중 여덟 이상은 우리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물음엔 응답 업체의 34.4%가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3.0~3.5%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0%, 3.9%에 달할 것으로 각각 전망했었다. IMF는 이보다는 낮지만 3.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회복도 더딜 것이란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 시기를 묻는 질문엔 응답기업의 91.2%가 ‘2016년 이후(48.1%)’ 또는 ‘올 하반기(43.1%)’로 답해 당분간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우리나라의 전반적 경제여건에 대해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또한 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우리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올해 투자 및 고용계획에 대한 질문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투자계획과 관련한 물음에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51.2%)’이라고 답했으며, ‘확대(20.0%)’보다는 ‘축소(28.8%) 하겠다’는 대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신규 채용 관련 질문엔 응답기업의 3분의 2 가량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65.9%)’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어 ‘축소(20.3%)’, ‘확대(13.7%)’ 순이었다. 올해 경영계획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를 묻는 질문엔 ‘저성장 · 저물가 장기화(36.7%)’, ‘세계경제 회복 지연(27.2%)’ 순으로 많았다.

또 정부가 우선순위를 둬야 할 핵심 정책과제로는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32.0%)’,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24.8%)’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8.0%가 연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실적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내수 침체 지속(35.8%)’과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20.1%)’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용옥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근의 경제상황을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올해 경기회복 여부도 현 시점에선 불투명한 만큼 경제활성화와 기초체질을 강화하는 데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은정 기자

우정의 어울림,
평화의 두드림

Friendship Together,
Peace Forever

2015년 대한민국에서
세계 군인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우정의
한마당 축제가 펼쳐집니다!

MUNGYEONG KOREA 2015
6th CISM World Games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2015년 10월 2일 ~ 10월 11일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6th CISM World Games Korea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Address.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Tel. (02)748-5662~9
Fax. (02)748-5655
Website. www.korea2015mwg.org
E-mail. cismmwg2015@gmail.com

김채환 안심창조밸리추진협의회 위원장

“지역 자원과 특색 최대한 살린 도시활력 사업 완성할 터”

김채환 안심창조밸리추진협의회 위원장은 정주여건이 뛰어난 살기 좋은 대구조성 해법과 관련, 기초자치단체별로 도시재생 및 활력사업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우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지역 개발과 함께 명품(名品)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도시활력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한다”면서 “재개발사업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사업에 그쳐선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만큼 해당 지역의 자원과 특색을 최대한 살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 안심창조밸리조성프로젝트 추진 배경과 궁극적 목표는?

A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에 의해 유래된 안심은 한자어로 安心을 뜻한다. 서기 927년 후백제 견훤과 치른 공산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왕건은 퇴각하던 도중 이 곳에 이르러 비로소 안심했다고 해서 유래된 지명이다.

안심은 풍수지리상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을 나타내고 있다. 한반도의 기(氣)가 한 곳에 모여 있는 태백준령 팔공산 앞자락에 있으며, 그 앞쪽에는 금호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다. 대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최근들어 잇달아 조성되면서 지역 사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안심은 대구의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인 탓에 지속적인 도시재생 및 활력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프로젝트인 안심창조밸리조성사업의 추진 배경이 된다. 안심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적극 활용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궁극적 목표다.

걷고 싶은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인 연근을 테마로 한 마을 조성에 나서는 동시에 현재 휴면상태에 있는 대구선 철도역사인 금강역 일원을 프리마켓파크로 활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실제로 안심은 전국 연근 생산량의 40~50%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대표 주산지로 꼽힌다. 현재 100여 가구가 모여 있는 금강동 일대에 연근 가공 및 판매장과 체험장 등을 두루 갖춰 관광자원화는 물론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역으로 기능을 상실한 금강역사 1만1천570㎡(3천500평)에 대해선 주민들이 즐겨 찾는 농·특산물 직판장 등으로 단장해 활용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심 일대에는 습지자원도 풍부하다. 안심습지와 인근의 점쇠늪 등을 친환경생태공원으로 단장할 경우 대구를 대표하는 명품(名品)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안심창조밸리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일대 정주여건은 크게 개선되는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제의 큰 축인 대구혁신도시 및 첨복단지와 연계해 도시 발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Q 안심창조밸리조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기울려야하는가?

A 안심창조밸리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국비와 시·구비 87억원을 들여 대구지역의 대표적 지역활력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 성패는 결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가에 달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만 안심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 힘을 합쳐주는 동시에 대구혁신도시 아파트 7천 세대 입주민들도 든든한 우군이 되어 주길 당부드린다.

Q 살기 좋은 도시 대구조성 위해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에 대해선?

A 안심이 변해야 대구 동구가 변하고, 동구가 변해야 대구가 변할 수 있다. 동구에는 그 만큼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지역을 넘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K2 공군기지와 함께 안심연료단지 이전문제가 대표적이다. 실

제로 동구 주민, 특히 안심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및 연료단지 비산먼지공해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이전하든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

우선 주민건강에 크나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안심연료단지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야한다. 개인적으로 경북도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영천 신령역사 인근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신령역 인근은 중앙선과 영동선 등을 활용할 경우 화물열차로 강원도 일원의 무연탄을 수송하는데 용의하다는 입지적 장점을 지닌다. 신령은 대구-포항고속도로와 접근성 또한 뛰어나 대구 동구에서 화물차로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지척거리에 있다. 무연탄 수송에 장점이 많은 적합지라는 뜻이다.

이에 반해 K2공군기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가 안보상 당장은 이전이 어려운 만큼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관계당국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한다.

Q 현(現) 시점에서 도시활력사업은 왜 중요한가?

A 고령화사회는 지역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고령층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대구는 아울러 최근들어 대구인근 지역의 개발 가속화에 따른 도심 공동화현상 등의 영향으로 적잖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 결국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본다. 거듭 강조하지만 도시재생 및 활력증진사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방법론에 입각할 때 재개발사업과 같은 차별성이 없는 천편일률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선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만큼 해당 지역의 자원과 특색을 적극 활용하고 반영할 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 중구가 근대골목을 관광 상품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중국인 여행객, 즉 요우커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거듭난 것은 좋은 사례다.

도시재생 및 활력사업에 나서거나 뛰어들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는 대구 중구의 성공 스토리를 벤치마킹한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프로젝트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판단된다.

Q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 대구시에 제안한다면?

A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탁상 행정식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해선 안 된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꼼꼼히 체크한 후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해야할 것이다.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행정이 되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대구시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사 인근에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여태껏 하세월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시가 고시해놓고도 관련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형편이다 이래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없다. 주민 입장에서 행정이 이뤄질 때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Q 지역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선?

A 대구시 못지않게 지역 정치권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균형감각을 갖춰야한다. 새누리당 일색이라고 해서 안일해선 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심 이반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대표적인 굴뚝 없는 산업이 바로 관광산업이다. 도시 재생 및 활력사업을 기반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대구는 관광객 1천만명이 몰려오는 국내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대구시도 관광도시 대구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도시활력증진 및 재생사업은 그 대안이자 희망이 될 수 있다.

글 | 서기대 편집장
사진 | 김원현 기자

경북도, 국비예산 11조 시대 닻 올렸다

경북도가 올해 국비예산 11조 시대를 본격 열었다. 국비예산 11조 시대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한해 광역 SOC 인프라 구축사업은 물론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전력을 쏟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상 첫 국비예산 11조 시대를 연 경북도는 그야말로 잔칫집 분위기다. 올해 확보한 국비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151억원 증액된 규모다.

김관용 도지사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07년의 2조원과 비교하면 무려 5.5배 급증한 것이어서 경북도의 위상이 크게 신장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올 하반기 경북 북부권으로 이전하는 신(新) 도청 시대를 앞두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경북도의 국비예산 대폭 증액 배경에는 주낙영 행정부지사와 실 · 국장을 각각 본부장과 반장으로 한 '국가투자예산확보 TF팀'을 일찌감치 가동하는 한편 전방위 예산확보 노력을 펼친 결과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앙부처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을 수시로 방문해 설득작업을 강화한 결과, 국비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예비타당성 선정사업 3건을 비롯해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김천-구미 국도 조성, 영덕 강구항 개발 등 신규사업 50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관련 53개 사업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2조8천397억원 규모이며, 해당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투입 규모를 살펴보면 경북도는 우선 올 한해 SOC분야에 6조3천243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표적 관련 프로젝트로는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사업에 4천540억원, 도담-영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에 2천500억원, 중부내륙고속 복선철도부설사업에 800억원,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2천278억원,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1천357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동해안의 접근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경북 북부권 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R&D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해 5천823억원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육성사업을 비롯한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조성 및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설계지원센터 구축사업 등이 대표적 프로젝트다.

문화 관련 사업 예산도 3천810억원을 반영하는 가운데 3대 문화권조성사업에 1천318억원을 투입하고 신라왕궁 · 황룡사 · 월정교 복원사업에 114억 원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 추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아울러 농림수산분야에 예산 9천286억원을 반영하고 동해안 국가어항 보수 및 보강사업에 나서는 동시에 숲가꾸기사업,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광역 SOC 인프라 구축 및 미래첨단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조기 실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라면서 "올 한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순대 편집위원

24 Hours ON:CAT Security Service
ON:CAT

안심 파트너! 온:캣!

스마트 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HD화질로 생생하게!
혼자 있는 어린 자녀, 부모님, 반려동물까지 온:캣으로 지켜주세요.

24시간 LIVE로 만나는 영상보안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ON:CAT!

약정 후 무상양도까지!

똑똑하고 실속도 잡는 온:캣 패키지

CCTV+방범보안+안심보험을 결합한 최첨단 영상보안관제시스템, 온:캣!
온:캣 패키지로 불안함도 잡고, 실속도 꽉 잡으세요!

불안을 남겨두지 마세요!

- 100만 화소의 선명한 HD화질
- 적외선 실시간 감시 기능으로 야간감시 가능
- 좌우 350도, 상하 120도의 넓은 감시각도
- 움직임을 감지해 실시간 알람 푸쉬 전송
- 내장된 스피커와 마이크로 쌍방향 음성 통신
- 실시간 저장 및 스케쥴링 기능

24 Hours ON:CAT Security Service
ON:CAT

문의전화 _ 1899-8112

대(對)중 수출 빨간불 … 한국 경제 경고등

대중 수출 증가세가 최근들어 급격히 떨어지면서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양국의 교역 규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중국 수출이 준다는 것은 그 만큼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중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재를 중심으로 국산화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중 수출 증가세 둔화 조짐

대중 수출실적은 최근들어 전반적인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지난해 5월 −9.4%에 이어 6월 −1.0%, 7월 −7.1%, 8월 −4.3% 등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5월 7.0%, 6월 7.2%, 7월 14.5%, 8월 9.4%를 각각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9월과 10월에는 각각 6.4%, 3.5%씩 회복세를 보였지만 11월엔 다시 −3.2% 역신장세로 돌아선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까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덩달아 늘어나는 전통적 한중 무역구조와 상반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지난 2010년 31.3%에서 2011년 20.3% 증가에 이어 2012년 7.9% 늘어나는 동안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각각 34.8%, 14.9%, 8.6%씩 증가하는 등 비슷한 추세 흐름을 보여 왔다.

이런 식의 한중 무역구조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중국의 경우 기존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산업재의 잇단

국산화 성공이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중 효자 수출상품이었던 석유화학과 IT, 기계류를 중심으로 수출물량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의 주력 수출품인 섬유제품 역시 중국의 섬유소재 생산 확대 및 잇단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성공에 이은 생산라인 확대 구축 영향으로 고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 기술 경쟁력 지속적 상승

중국은 얼마 전까지 만하더라도 수출 의존형 무역구조를 보이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대중 무역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어왔다. 중간재 등 산업재 수입 확대에 따라 한중 무역에서 흑자 기조를 장기간 이어온 게 사실이다. 이런 무역구조는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무역역조현상을 수십년간 이어온 것과 비슷한 모습을 띠었다. 하지만 최근들어선 사정이 달라졌다.

중국이 거대 소비시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중간재 보다는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기술력 향상에 따라 주요 산업재를 중심으로 수입품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예컨대 LCD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기술력 격차를 좁히면서 최대 라이벌로 부상한 상태다. 중국의 TV용 LCD 자급률은 지난 2011년 2%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엔 35.7%로 큰 폭으로 신장한 상태다.

교역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16년엔 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다 스마트폰시장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등 최대 악재를 만난 형국이다. 조선업과 철강, 석유제품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중 수출비중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수출실적 부진은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중국수출마저 최근들어 현격히 감소하면서 한국경제가 방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에 나온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목 중 자본재와 중간재 비중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국의 산업업황 전망이 어둡게 나올 경우 우리나라 증시가 곧바로 조정

을 받는 등 속칭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폐렴에 걸린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재 수출 눈 돌려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선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로 눈을 돌려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기존의 자본재나 중간재 수출 중심에서 소비재 수출 및 서비스분야 진출을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전체 수입 중 내수시장용 품목 비중은 지난 2007년 50%에서 최근들어선 60% 이상까지 확대된 가운데 미국, 일본, 독일 등 글로벌 주요 수출국은 거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빨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독일은 대중 수출품목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웃돌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각각 70%와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3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소비재 수출에 주력해야한다"면서 "중국의 내수 및 수출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만 한중 교역에서 지금과 같은 흑자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배은정 기자

쌀값 하락세 지속… 변동직불금 예산 대폭 증액
대구 · 경북 지난해 벼 재배면적 전년보다 감소

작황 호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벼농사 풍작을 기록한 가운데 이에 따른 정부의 쌀변동직불금 관련 예산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가 대비 시중 쌀값이 하락할 경우 농가에 이를 보존해 줘야하기 때문이다. 대구 · 경북의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은 공공시설 및 건물건축이 늘어난 데다 도로편입 및 유휴농지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쌀 변동직불금 예산 3천154억원 확정

지난해 벼농사는 작황 호조에 따라 풍작을 기록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밝히고 있다. 병충해 발생이 예년에 비해 현격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폭우 및 태풍 피해가 없었고 가을철 결실기에 들어선 날씨가 좋아 일조량이 풍부해진 덕분이다.

국내 쌀시장은 벼 재배 풍년 해의 경우 쌀값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투입하는데 반해 흉작 시에는 시중에서 호가(好價)에 거래되면서 밥상 물가를 올리는 이중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벼농사 풍작을 기록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1천472% 올린 3천154억원으로 확정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시중 쌀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셈이다. 쌀변동직불금은 벼 수확기 평균 쌀값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목표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까지 보전해 주는 정책 자금으로, 매년 2월에 농가에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 목표가는 80kg당 18만8천원 선이었다. 쌀 변동직불금은 지난 2010년 풍작을 기록하면서 쌀값이 정

부의 목표가 아래로 떨어지자 2011년 초 7천501억원을 지급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따라서 올 초 쌀 변동직불금을 지불하면 4년 만에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620억원, 2012년 252억원, 2013년 200억원 등 최근 3년간 1천72억원의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반영했지만 실제로 시중에서 정부 목표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농가엔 지급되진 않았다. 하지만 올핸 사정이 다르다.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쌀변동직불금 지급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내 쌀 생산량은 지난 2010년 미곡 기준으로 430t을 육박했던 것을 정점으로 2011년과 2012년 각각 422만t과 400만t까지 줄어들었지만 2013년엔 다시 작황호조에 힘입어 423만t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쌀값은 최근들어 가격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쌀값 하락의 주범은 단연 소비 부진 탓이다. 서구화된 식습관은 물론 외식문화 확산에 따라 쌀 소비는 매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게 현주소다. 실제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67.2kg까지 감소한 상태다. 이는 지난 2009년과 비교하면 5년 새 6.8kg 가량 줄어든 것이다.

대구 · 경북 벼 재배면적 전년보다 감소

쌀값 약세가 이처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 경북의 지난해 벼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천860ha(1.7%) 감소한 11만1천666ha로 나타났다. 벼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은 논벼 재배면적이 줄어든 게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고 통계청 측은 분석했다.

대구 · 경북의 경우 최근들어 벼 경작지를 활용한 공공시설 및 건물 건축이 활발한 양상을 띤데다 도로편입은 물론 형질변경에 이어 농촌사회의 고령화 확산에 따라 유휴지가 대폭 늘어난 탓이다.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논벼보다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시설작물을 비롯한 과수, 특용작물로 방향을 돌린 농가가 늘어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표한 '농축산물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10a당 시설참외 소득은 614만4천원, 사과는 387만8천원선이었던데 반해 논벼는 고작 57만8천원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 상주, 의성 순으로 벼 재배면적 많아

지난해 경북지역의 벼 재배면적은 시 · 군별로 경주가 1만2천719ha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상주 1만2천519ha, 의성 9천933ha, 예천 8천411ha, 포항 7천178ha 순이었다. 이들 5개 시군의 벼 재배면적은 대구 · 경북 전체 벼 재배면적의 46.2%를 차지하는 것이다.

울릉도를 제외한 경북도내 22개 시 · 군 중 벼 재배면적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영양으로 901ha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올해 벼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6.1%(194ha)로 감소한 2천966ha에 그쳤다.

홍영락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은 "쌀값 하락세 영향으로 시설작물 등 대체작물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공공시설 및 건물건축은 물론 형질변경에 이어 유휴지가 늘어간 것도 재배면적 감소로 이어진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한다. 그동안 20년간 미뤄왔던 쌀시장 빗장을 완전 푼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농산물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쌀은 국민들의 주식(主食)인 점을 인정 받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다시 추가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총 2차례에 걸쳐 유예를 받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입쌀에 대해 500%대의 고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런 내용의 정부 발표이후 전국적으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쌀 시장 개방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르는 등 정부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일었었다.

배은정 기자

올해 지역 경기 전망 '흐림'
지역기업 1천250곳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지역 경제가 불황탈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기업 1천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경기전망 조사 결과, 이런 전망치가 우세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일종의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사 결과, 지역 기업들은 2015년 경기전망에 대해 '악화'될 것이란 응답이 49.0%로 '호전(21.6%)' 보다 높았다. 대내외 불확실성 가중 속에 올해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이 중 '악화'될 것이란 응답은 업종별로 '유통업'이 5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소비 중심의 내수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선언에 따른 금리 인상 악재를 비롯한 저물가 지속, 지정학적 위험 확대 등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많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 '경기가 호전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 중에선 '제조업'이 25.7%로 가장 많은 가운데 업종별로는 '전기 · 전자' 36.4%, '섬유' 31.2%, '자동차부품' 22.2%, '기계 · 금속' 13.4%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애로 요인에 대한 물음에는 '경기침체'가 51.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금사정' 14.6%, '환율변동' 9.0%, '인력수급' 8.2%, '노사관계' 7.7%, '기업규제' 6.0%, '원자재 조달여건' 1.7% 순이었다.

지역 기업들은 아울러 최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철폐 등을 위한 경기 활성화책을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기업들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 ▲대구시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중소상장기업 포함 ▲건설현장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개선 ▲외국인 근로자 숙련단절 방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제도 운용방안 개선안 등을 정부 및 대구시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요건완화 요구 건의의 경우 타 지역에서도 관련 유사 사례 및 건의 건수가 많은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자금의 중소상장기업 포함 요구안에 대해서도 상장기업이라도 기업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이번에 건의된 외국인 근로자 숙련단절 방지책과 관련, 지역 산업계에선 신규 고용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한 만료 전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현장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도 현행 보다 대폭 개선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애로 요인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에 대해선 철폐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은정 기자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pohang 포항시

취수원 구미이전 두고 대구 – 구미시 간 갈등
“이전해야한다 Vs 절대 안 된다” 입장차 뚜렷

취수원 이전문제를 둘러싼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안전성이 검증된 취수원 확보를 위해 구미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대구시의 입장에 반해 구미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 묶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지난해 연말 대구 취수원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 관련 예산의 불용처리 문제가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대구시와 구미시의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정부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재점화

대구시의 낙동강 취수원 구미이전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시가 정부에 이를 건의하면서부터다. 대구의 낙동강 취수원보다 상류에 위치한 구미와 김천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인 페놀 및 다이옥산 유출사고가 잇따르자 불안감을 느낀 대구시에서 대안으로 낙동강 취수원을 아예 구미로 이전하자는 지역 사회의 여론을 등에 업으면서 수면위로 본격 오른 것이다.

낙동강 취수원 구미이전문제는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지선(地選) 대구시장 출마 새누리당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서 주요 공약으로 채택될 만큼 대구시에서는 대표적 숙원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취수원 이전을 둘러싼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의 골은 지난 연말 한층 깊게 패인 상황이다. 정치인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2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취수원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

역관련 예산이 정부와 정치권의 방치 및 무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이기주의로 불용처리될 위기에 놓였다"며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한 것이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타당성 용역 조사비 10억 원을 확보했지만 최근까지 집행된 검토용역비 1억7천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2천300만원은 미집행으로 인해 불용 처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취수원 이전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면서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 정치권에서 연석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참에 이 문제 매듭짓자 Vs 수용할 수 없다" 평행선 지속

홍 의원의 이런 제안 이후 대구지역에선 이 참에 취수원 문제를 매듭짓자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언론 사설도 지역 유력 일간지에 실리는 등 이 문제는 지난 연말 지역사회의 핫이슈로 부상한 양상이다. 낙동강 취수원 이전을 위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논리다. 지자체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정부가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반해 구미시의 입장은 다르다. 대구지역에서 일고 있는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구시의 논리에 맞서, 단순한 취수원 이전만으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낙동강 전 구간의 영구적 수질 보전과 취수원 시설의 대체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낙동강 수질 보호를 위한 관련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수처리시설 등을 통해 오·폐수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강우 시 초기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충시설을 조성하는 등 낙동강 수질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조정 역할 맡아야한다는 지적도 부상

취수원 이전 문제 재부각에 구미사회도 발끈하는 분위기다. 급기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성명발표도 잇따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구취수장 구미이전을 반대하는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 성명을 통해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홍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취수원 이전문제를 공론화한지 엿새 만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해당 예비타당성 용역은 대구취수원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일종에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취수원 이전을 결사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혔다.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의 이 같은 입장은 구미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위성과 명분론도 펼치고 있다. 이에 앞서 관련 현안에 대해선 관계당국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없음이란 결론이 난 만큼 더 이상 왈가불가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유진 구미시장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문제 해결의 핵심 키를 정부에서 쥐어야한다는 지적도 대구지역 사회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의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구시와 구미시가 서로 다른 명분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찾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양 지자체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 제시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편집국〉

대구 · 경북 재정자주도 곤두박질

지난해 대구시의 재정자주도가 크게 나빠지면서 재정 건선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같은 기간 경북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재정자주도가 곤두박질친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는 아울러 사회복지 예산 반영 비중도 해를 거듭할 수 록 늘어나면서 대표적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 · 경북 사회 · 경제지표 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재정자주도는 일반 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않은 일반 재원 비중을 뜻한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는 의미다.

대구시 · 경북도 재정자주도 악화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재정자주도는 67.6%를 기록,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다. 재정자주도가 7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대구의 재정자주도는 2010년 73.6%, 2011년 74.1%, 2012년 75.4%, 2013년 75.0%를 각각 기록했다.

경북 역시 지난해 재정자주도가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경북의 재정자주도는 전년의 73.2%보다 7.1%p 하락한 66.1%에 그쳤다. 대구와 경북의 재정자주도가 이처럼 떨어지면서 각종 재량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독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지난해 전체 예산의 33.13%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2012년 27.51%에서 2013년 28.58%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셈이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26.10%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같은 기간 경북의 사회복지예산도 2012년 23.78%에서 2013년 24.92%에 이어 2014년 28.19%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나자 전국 각 지자체마다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이 때문에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신규 사업 추진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하소연마저 공무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경북 최하위권 추락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대구와 경북은 그다지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201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지수 조사 결과, 대구는 전국 평균(7.18) 수준인 7.11에 머물렀고, 경북은 전국 최하위권인 6.84에 그쳐 체면을 구겼다. 서울지역 공공기관(청렴도 지수 7.64)이 가장 청렴한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충남은 6.74로 꼴찌를 차지했다. 충남지역 공공기관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하다는 뜻이다.

반면 문화체육시설 경쟁력에선 대구와 경북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2012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조사에서 대구는 고작 2.43개에 그친 반면 경북은 6.67개로 전국 평균(4.28개)을 웃돌았다. 아울러 인구 10만명 당 체육시설도 2013년 기준으로 대구는 96.06개로, 전국 평균(110.33개)에 못 미쳤지만 경북은 111.58개로 소폭 상회했다.

2013년 기준 유아(0~4) 1천명 당 보육시설수는 대구 15.51개, 경북 19.98개로 각각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19.02개였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노인 1천명 당 여가복지시설 수는 대구가 3.52개로 전국 평균(8.34개)을 크게 밑돈데 반해 경북은 12.71개에 달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교통사고 다발지역 불명예

국민연금 가입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대구와 경북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3년 기준으로 인구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조사에서 대구와 경북은 각각 33.8%, 37.3%로 조사돼 전국 평균(40.6%)을 밑돌았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대구와 경북 모두 전국 평균(2.6%)를 크게 상회한 3.9%, 3.7%를 기록했다. 대구 인구 100명 당 3.9명, 경북은 3.7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의미다.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조사에선 대구와 경북의 명암이 엇갈렸다. 2012년 기준 대구지역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는 인구 1천명 당 2.89명에 달한 반면 경북은 1.87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2013년 기준으로 의료기관 병상 수는 인구 1천명 당 대구가 12.91개, 경북은 13.67개로 각각 조사됐다.

대구는 그러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란 오명을 얻었다. 2013년 기준으로 대구지역 자동차 1천대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29건으로, 광주(12.76건)와 강원(11.89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화재발생 건수는 2013년 기준으로 대구가 1천538건, 경북은 2천73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윤종호 동북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은 "대구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초 · 중 · 고교생 월 평균 사교육비 조사에서 1인당 24만2천원을 기록해 전국 16개 시 · 도 중 네 번째로 지출규모가 많았다"면서"이에 반해 경북은 전국 하위권인 18만7천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배은정 기자

修己와 공자의 4敎

인재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누자면 영어 알파벳 'I' 자와 'T' 자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오직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 유형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후자는 전문성(Specialty)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일컫는다. 알파벳 대문자 T 모양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T' 자형 타입의 특징은 특정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것은 물론 자신과 무관한 다른 분야까지 폭넓은 지식을 보유한 인재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전공분야에 무한한 깊이를 가진 동시에 다른 분야까지 두루 섭렵한 'T' 자형 인재가 우리 사회에서 대접받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이는 기업체도 마찬가지다. 다국적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GE)은 T자형 인재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정의한 바 있다.

'T' 자형 인재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단한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다. '불여구지호학야(不如丘之好學也).'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다. 성현(聖賢) 공자가 외친 말이다. 공자는 이처럼 평생을 배움에 힘썼다고 한다. 일평생을 배움의 삶을 산 현자(賢者)가 바로 공자다. 이 가르침은 공자 당대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정보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호학(好學)의 삶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매우 중요하다. 배움에 뒤쳐져서는 낙오자의 길을 걷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움과 공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된 셈이다.

배움과 공부는 유교사상의 핵심 가치로도 평가받고 있다. 논어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공자의 말에서 유래한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안다'는 뜻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 이는 조선시대 선비의 삶에 가장 잘 묻어난다. 이를 철저히 실천한 위인 또한 선비다. 옛 선비는 아울러 자기수양에 투철했던 셀프리더로도 평가받고 있다. 수기치인(修己治人),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삶을 산 점은 대표적 사례다. 선비들은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고 자신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정도로 수기(修己)의 가치를 철저히 따랐다고 한다. 이 때 수기(修己)는 달리 말해 자기성찰을 의미한다. 자신의 현 위치를 정확히 깨닫고,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 자기 닦음, 곧 자기성찰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닦아 성현에 이르고자 자기계발에 힘쓴 삶을 산 선비정신이 자랑스러울 따름이다.

중용 첫머리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하늘이 명하는 바를 성(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하며, 도를 닦는 것을 일컬어 교(敎)라 한다. 하늘이 명하는 바는 사람이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본연의 바탕 즉, 본성을 의미하고, 도(道)란 한마디로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말하며, 이를 익히는 것이 곧 교(敎)라는 것이다. 유교에서 인간은 신(神)에게 의지하고 구원을 구하기 이전에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의 본성과 자질, 능력을 갖춘 하나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야한다고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공자 또한 인간의 길을 가기 위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를 흔히 공자의 4교(敎)라고 불린다. 그 첫째는 문(文)이다. 문이란 학문을 닦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온고지신을 통해 학문을 닦아야함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행(行)을 닦아야함을 말하는데, 행은 실천을 뜻한다. 교언영색(巧言令色)을 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충(忠)의 정신이다. 충이란 몸과 마음을 다해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공자는 끝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신뢰가 이뤄져야함을 뜻하는 신(信)을 강조했다.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불행히도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자살률 1위란 불명예도 안고 있다. 행복은 자기만족에서 발원하는 일종의 인간 감정의 한 종류다. 행복한 삶은 현대인 누구나 바라는 인간 내재적 소망과도 일맥 상통한다. 옛 선인들이 몸소 실천한 수기(修己)에 기초한 철저한 문(文)과 행(行), 충(忠), 신(信) 실천을 통해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으면 어떨까 한다.

이진구
경영저널 대표이사 · 발행인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
거꾸로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밤낮없이 쿵쾅거리며 뛰는 우리 아이. '아이들이 다 그렇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방치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밤 늦은 시간에도 소음을 견뎌야 하는 아래층 이웃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배려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마을기업, 주민 소득향상 첨병 '눈길'

최근들어 전국 각 지자체에서 마을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주민이 직접 참가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뜻한다. 주민 주도로 마을의 주요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펼쳐, 소득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두겠다는 것이다.

대구 · 경북지역 주민 주도형 마을기업 시선집중

경북도는 최근 도청 제2회의실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2014년 우수 마을기업 35곳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내 23개 시군별로 1차 심사를 거쳐 추천된 신규 24개 사업과 2차 재지정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가능성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수마을기업 35곳을 최종 선정했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에 지정된 우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컨설팅, 판로지원사업 등을 펼쳐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역에서도 마을기업의 활약은 두드러지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마을기업 78곳이 활발한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마을기업에는 한 곳당 평균 7.7명씩 고용돼 있으며, 연매출은 업체당 6천223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셈이다.

마을단위 특화사업 발굴 통해 부가가치 극대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현재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추세다. 큰 틀에서 볼 때 마을단위 특화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

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마을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사업 아이템을 발굴·육성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지난 1997년 발발한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시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육성책을 활발하게 내놓고 있는 분위기다.

마을기업의 경우 현재 지자체에선 행정 등 일부 분야에 국한해 간접적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마을기업 설립을 위해선 주민 출자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10%를 상회해야하고, 출자에 참가한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권을 지닌다.

마을기업 육성 주력

대구시와 경북도 또한 정부 정책에 맞춰 마을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만 마을기업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지정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마을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만 신규 진출을 허용하고 마을기업 설립 후 향후 3년간의 수입 및 지출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을기업 신규 지정요건 중 사업성 분야 배점을 상향 적용하고 마을기업 설립 전 주민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사업성 강화를 통해 전체 마을기업의 경영 건전성 및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마을기업은 궁극적으로 주민 주도로 마을의 주요 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에 두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국비 등 사업비 190억원을 들여 신규 및 재선정작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430개 마을기업을 선정,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경영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고, 최대 2년간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민경량 편집위원

남부권 신공항조성사업 백지화 우려감 확산
영남권 5개 시·도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둘러싼 입장차 여전

남부권 신공항조성사업이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지연 등의 이유로 이명박(MB)정부에 이어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은 현재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 불발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관련 용역작업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2016년 총선과 맞물릴 경우 자칫 지역갈등의 불씨로 작용하면서 백지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남부권 신공항조성과 관련해 대구시, 부산시 등 영남권 5개 시·도와 함께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 전반의 내용과 향후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가져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밀양 입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시는 가덕도 당위성을 굽히지 않고 있는 등 신공항 문제는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실정이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남부권 신공항조성사업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최근 '민자사업으로 독자 추진할 수 있다'는 돌발 발언이후 지자체간 갈등이 한층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덕도 유치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서 시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민심은 들끓고 있다. 경남도와 울산시 역시 남부권 신공항 입지로 밀양 유치를 바라고 있는 만큼 부산시장의 발언이 갖게 될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서 시장의 이번 남부권 신공항 민자유치 추진 발언은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정부 압박용'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항공법상 공항 건설은 정부 허가 없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덕도에 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이 때문에 나온다.

남부권 신공항조성사업은 이대로 가다간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과 같은 영남권 5개 시·도간 양보없는 갈등국면이 지속될 경우 MB정부의 백지화 수순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구시와 부산시 등 5개 지자체간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언제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에 전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국토부가 절충안을 조속히 내놔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남부권 신공항은 영남권 5개 시·도 주민들이 항공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1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돼야한다"면서 "밀양은 이를 만족하는 최적지"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 영남권 5개 시·도의 입장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 등 4개 시·도는 영남권 주민들이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내세운 반면 부산시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 조성돼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편집국〉

남부권 신공항 후보지

일회용 나무?

한 번 쓰고 버린 종이컵은 일회용이지만
종이컵의 원료가 되는 나무는 20년을 자라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이컵은 한 해에 약 120억개 정도에
13만 2천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나무 4,800만 그루를 심어야 하는 양과 같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증상은 같아도 원인은 다양한 소화기 질환

회사원 최모(39) 씨는 가슴이 쓰리고 목에 이물감이 느껴져 병원을 찾았다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약을 먹으면 증상이 좋아지다가도 병이 만성적이어서 때때로 가슴이 쓰린 위산(胃酸) 역류 증상을 겪는다. 술 마시는 횟수도 줄이고, 담배도 끊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잘 낫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그를 고생하게 하는 원인은 스트레스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북부검진센터 허정욱원장(내과전문의)은 "소화기는 우리 몸에서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이자,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해 온몸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식도, 위, 소장, 대장 등 소화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해소 및 식습관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고장 내는 원인, 스트레스

위식도 역류질환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질환이다. 역류에 의해 식도에 궤양(潰瘍)이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도 위식도 역류질환의 일종이다. 이 병은 위와 식도 사이의 경계 부위가 조절되지 않아 위가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발생한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큰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심사 결정 자료를 이용해 위식도 역류질환을 분석한 결과 40~50대 여성 중 위식도 역류질환 진료 인원수가 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등학생 자녀의 입시 문제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주원인이다.

별것 아닌 듯해도 신경 쓰이는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더라도 더부룩함, 속 쓰림, 트림 등의 소화불량 증세는 소화를 주관하는 기관인 입 · 식도 · 위 · 십이지장 · 소장 · 대장 중 한 곳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겪게 된다. 소화불량 증세가 한 달 이상 이어지면 위 내시경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게 좋다. 그런데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소화불량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기능성 소화장애'라고 한다.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경성 소화장애', '과민성 소화장애'라고도 한다. 요즘 이런 소화불량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화불량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06년 48만9천251명에서 2011년 64만514명으로 30%나 증가하였다.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는 게 어렵거나, 위·장 운동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물이 소화효소와 잘 섞이지 않거나, 영양소가 몸속에 잘 흡수되지 않는 증상 중 하나만 있으면 소화불량이 생긴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구역질·트림이 나거나, 속 쓰림·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위염·위궤양·담석증·식도염 등의 질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으나, 이런 질환이 없는데도 소화불량 증상이 지속된다면 '기능성 소화장애'다.

수백 번 강조하는 꼭꼭 씹어 먹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감정중추와 신경중추가 영향을 받아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온몸에 퍼져 있는 교감신경은 신체를 긴장 상태로 만든다. 이 때문에 입과 식도에서는 점막을 촉촉하게 만드는 점액이 잘 분비되지 않고, 위장은 연동 운동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산·소화효소 분비가 줄어 원인을 찾거나 치료하기가 위염·위궤양 보다 더 힘들 때도 있다. 기능성 소화장애, 소화불량이 있으면 식사를 할 때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소식하며 음식을 잘게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생활관리와 약물치료로 효과가 없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신경안정제를 쓰기도 한다. 기름기가 많거나 맵고 짠 음식은 병을 악화한다. 식후 불쾌감을 탄산음료로 푸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마시면 오히려 위 괄약근이 약해져 역류성식도염까지 생길 수 있다. 불특정 소화기질환에는 위 운동이 잘 안 되는 위 마비도 있다. 위가 잘 안 움직여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지 않아, 음식을 먹지 않아도 늘 더부룩하고 구토가 나며 복통이 있다. 당뇨병이나 위 수술 환자에게 많다. 위 마비일 땐 기름기 많은 음식과 채소류를 피한다. 하루 3끼를 4~5끼로 나눠 먹는 것이 좋고,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도록 중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식후 1~2시간 내에 눕지 않는다. 특히 긴 줄기의 채소가 위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다른 음식물과 결합해 돌(위석)을 만든다.

화장실이 가까워야 안심! 과민성 대장 증후군

긴장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설사를 하고 복통을 느끼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는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하다. 시험 보기 전이나 프레젠테이션 전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심한 설사가 나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우리나라 성인 10~15%가 앓는 것으로 추산될 만큼 흔한 병이다.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고, 증상에 따라 지사제나 변비약 등을 복용해도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면 증상이 언제든지 재발한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약물치료는 증상의 일시적인 완화 효과만 있을 뿐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환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내는 것이다. 장 기능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으로 바꾸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채소와 과일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양대 증상인 설사와 변비를 모두 누그러뜨린다. 기름기가 많거나 맵고 짠 음식은 장을 자극하고, 과당이 함유된 청량음료도 좋지 않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팀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성인 7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유산균이 들어 있는 기능성 발효유를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유산균 발효유처럼 만든 위약(僞藥)을 8주간 마시게 했다. 기능성 발효유를 섭취한 그룹은 증상 점수가 52.3점(100점 만점)에서 22.3점으로 내려갔고, 위약 그룹은 45점에서 29점으로 내려갔다. 가짜 유산균 음료를 마신 그룹도 점수가 내려간 것은 '증상 개선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실제로 증상이 완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은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교통체증에 묶여 있으면 불쑥 나타난다. 화장실에 못 간다는 불안 때문이다. 차가 막히는 먼 길을 운전하거나 장거리 등산을 갈 때는 미리 휴게소 등 화장실이 있는 곳을 확인해 놓는 게 좋다. 배가 아파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안도감이 증상 발생을 줄인다. 변비가 주 증상인 사람은 일주일이상 낯선 지역에 갈 때는 미리 변비약을 먹어두는 게 좋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中 태부중장비그룹,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투자

중국 태부중장비그룹이 포항 영일만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중장비 생산시설 투자에 나선다. 태부중장비그룹은 지난 연말 포항시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계획에 합의했다. 포항시는 지난 연말 리한성 총재를 비롯한 ㈜태부중장비그룹 임원진 및 실무단 10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포항시투자유치실무단이 최근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위치한 태부중장비그룹을 직접 방문해 투자를 요청, 결실을 맺었다.

포항시는 태부중장비그룹이 영일만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전용단지 잔여부지 14만2천㎡(4만3천평)에 투자를 최종 확정지을 경우 투자유치금 5천만달러, 일자리 300여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부그룹은 자본금 2천200억원, 근로자 1천500명 규모의 중장비 제조업 및 일반 계약서비스업체로, 지난해만 해외 수주액 236억위안(4조2천억원)을 기록한 중국 최대 중장비 생산업체다.

(주)올품, 어려운 이웃돕기 온정 '훈훈'

경북 상주시 초산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닭고기 가공업체 (주)올품(대표이사 변부홍)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주)올품은 지난 연말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달라며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사랑의 닭고기 2천마리'를 상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닭고기는 (주)올품이 직접 사육하고 생산한 국내 최고 품질의 프리미엄 축산물로, 상주시는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Food Bank)를 통해 홀몸 어르신 및 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주)올품은 지난 연말기준으로 근로자 850여명이 몸담고 있으며, 하루 평균 30만마리의 닭고기를 가공·판매하는 상주지역 우수 중소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변부홍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성군, '안전대진단 군민참여 확산대회' 개최

의성군은 지난 연말 군청에서 '안전대진단 군민참여 확산대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안전은 지키GO(고), 사고는 줄이GO'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페인에선 의성군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신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의성군은 캠페인 참가자들과 함께 의성 시가지 일원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겨울철 재난재해를 대비한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거리 캠페인'도 함께 가졌다.

서수환 의성군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 진단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는 등 군민들의 안전 의식 고취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의성'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ww.KEPI.or.kr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KEPI 한 | 기 | 연

Your best partner

경상북도

이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